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서울 종로 일대에 모인 시민들

“헌재, 헌정 질서 회복을” 한목소리

尹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이미 탄핵 선고 끝났어야”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연이어 개최됐다. 이들은 “윤석열은 감옥으로, 우리는 미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8대0으로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사회자가 “이미 선고가 끝났어야 할 탄핵 선고가 미뤄지면서 불안하십니까”라고 외치자 “네!”라는 함성이 터졌다. 추최 측은 헌법재판소가 하루 빨리 선고기일을 확정해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퇴진비상행동 1만 8000여명, 민주노총 1만5000여명, 야당 1만여명, 촛불행동 2500명 등 총 4만4000여명이 모였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심자각에서 15차 범시민대행진을 열었다. 비상행동은 이날을 ‘100만 시민 총 집종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참여를 독려했다. 오후 3시부터 광화문 동심자각 앞에서 열린 야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는 아전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출발해 8.7km 가량을 걸어 광화문 집회에 합류했다. 민주노총은 을지로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 4시께 비

상행동 집회에 합류했다. 이날 집회로 광화문 바로 앞 동심자각부터 안국빌딩까지 약 600m 사이 8개 차로가 봉쇄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 역사에서 3월15일은 이승만 독재정권이 부정선거로 국민 주권을 박탈한 날이지만 오늘부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가 주권자의 힘으로 바로 세워지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외쳤다.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집회에 나 왔다는 여성 양모(28)씨는 “당연히 탄핵이 될 것이라 생각해 한 번도 집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나왔다”며 “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막았으면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족이 매주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박모(56)씨는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할 때 여의도 집회에도 나왔다”며

“(선고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면 좋겠다”고 했다. 해가 지자 참가자들은 각양각색의 응원봉을 꺼내 들고 노래에 맞춰 “윤석열 파면” 구호를 외쳤다. 탄핵 촉구 집회 측은 오후 6시30분경부터 을지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한편 광화문 일대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도 개최됐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 수십대를 동원해 두 겹으로 차벽을 세웠다.

/뉴시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심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 “18일 서해안 철도 노선 국가계획 반영 정책포럼 연다”

이번주 도정 추진사항 발표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은 지난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 전북도의 주요 추진 사항과 일정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지역구와 지역 연고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해안 철도 노선의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포럼이 열릴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논의와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군산, 부안, 고창, 영광, 장성 등 5개 시·군이 이와 관련한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주요 일정으로는 △19일 국제여성보건국 정례 브리핑과 자치도 특별 사업 발굴 추진단 본격 가동,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산별 예방 캠페인 행사 △20일 군산항 활성화 대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변인이 지난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책 적극 추진 △21일 국가 예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 등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7일에는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업무 협약식이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희생 보듬 자금 업무 협약식이 오후 2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오는 28일에는 새만금 수목원에서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식목일 행사가 온난화 현상으로 앞당겨 시행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尹 조속 파면, 무너진 헌정질서 바로 세우는 길”

전북변호사회·민 전북지부, 성명 내고尹파면 촉구

전북 지역 법조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4일 성명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오직 조속한 파면 결정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도들은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은 즉시항고하지도 않았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조차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헌정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

혼란으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고 국가 경제와 국력은 몰락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헌재가 조속히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지방변호사회는 헌정질서의 회복을 염원하는 주권자이자 법조인들로서 헌재가 지체없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전북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행위는 전 국민이 목격자가 됐다”며 “국민은 윤 측의 기괴한 주장을 참아가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렸지만 헌재는 탄핵 사건 결정을 계속해서 미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인권을 운운하며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위헌적 판단을 내려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검찰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부정되며 오로지 단 한 명을 위해 법 해석이 뒤바뀌는 사상 초유의 헌정 질서 유린”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헌재의 책무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멈추고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헌재는 지체없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미국 정부 ‘한국, 민감국가 지정’... 최하위 범주

야 “尹 탄핵해 정상국가 되돌려야”

“윤, 모든 혼란의 원흉...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복원율”

야당은 지난 15일 한국이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SCL)’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을 돌리며 “즉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의원단은 “비록 우리가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로서 앞으로 원자력, 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지난 1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장관은 여전히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했다”며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외통위 전체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가 관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주미 한국대사관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외통위 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한 한국의 정정불안과 국민의힘의 독재 해무장론 주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무모한 발언이나 행동이 우리의 국익에 얼마나 큰 훼손이 될 수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SCL 분류가) 불법비상계엄에 따른 후과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 70년 한미 동맹마저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미 에너지부는 올해 1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조치로, 한국은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올랐다. /뉴시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尹 파면 촉구 천막농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장영국 대표의원은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첫날 농성에는 최형열 의원(기호행정위원장)과 정종복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이 나섰다. 장영국 대표의원은 “내란수괴 석방으로 또다시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국민들과 도민들은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했으며,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 등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퇴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파면이 정의이고 유일한 국가 정상화의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성을 비롯하여 도민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행동을 전개할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회복하자”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운동본부 회원 30여명과 국주영은·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참석했으며, 박상준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전경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전북지부 변호사, 송미옥 전국여성성민회 전북도연합회 회장이 차례로 발언했다. 이들은 “헌재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길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가 파괴된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특혜적인 판단을 내려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인했다”며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과 검찰, 내란 세력의 합작을 규탄한다”며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 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가 다시 ‘날’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산물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2월 3일 국회를 지켜낸 것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도 모두 시민의 힘이었다”며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고, 평일에도 10만~20만 명의 시민이 모여 파면을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파면시킬 것”이라며 “3월 15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외칠 것”이라며 “우리의 합성으로 권력의 거지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원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이만호 기자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한동훈 재수사 착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1차 부실 수사 비판을 받기도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용 전 국민의힘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용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25일 개최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지난 14일 회의를 개최하고, 제273회 임시회를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이날 위원회에서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돼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부류됐다. 이번 임시회에는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